

'절세'보다 '정당한 납세'가 기업 평판 높인다



삼일회계법인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매경ECONOMY 공동 기획

명순영 기자 msy@mk.co.kr

반진욱 기자 halfnuk@mk.co.kr

“세금은 곧 비용이다.”

“절세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안 내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

지난 한 세기 이상 이어져온 세금에 대한 통념이다. 만국 공통으로 기업가에게 절세는 곧 미덕이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은 ‘안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였다. 다국적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유명 회사를 세워 논란이 됐던 ‘파나마 페이퍼’ 사건은 기업이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들어 이 같은 통념이 깨지는 분위기다.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특히 기업 평판이 중요한 소비재 기업은 ‘정당한 세금’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다. ‘탈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 불매운동 등 기업 매출에 타격이 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영국법인이 대표적이다. 과거 스타벅스 영국법인은 영국에서 많은 이익을 냈지만 수익에 비해 세금을 미미하게 냈다. 이전 가격(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약 10년 동안 조세 회피 정책을 실시해왔다. 2012년 로이터통신이 스

ESG의 모든 것 시리즈

- ① 왜 지금 ESG인가
- ② ESG 국내외 동향 살펴보니
- ③ ESG 성적표 보는 법
- ④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법
- ⑤ ESG 성공을 향한 'Top Secret'
- ⑥ ESG로 'How to make Money'
- ⑦ 세금 어떻게 대응할까
- ⑧ 쓰레기, 탄소 '없어야 산다'
- ⑨ 사회 기여도와 투명성 높이는 법
- ⑩ CEO가 명심해야 할 ESG 10계명

타벅스의 탈세 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실상이 알려졌다. 폭로 후에도 스타벅스 측은 “정당하게 낼 세금은 다 냈다”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분노한 영국 국민들이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였다.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자 스타벅스는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영국 정부에 납부했다.

김정홍 OECD 조세센터장은 “국제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제는 함부로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ESG 평판이 중요한 기업들은 ‘조세 전략 잘 짜서 세금을 잘 낸다’는 식의 홍보를 적극 펼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SG 경영을 중시하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기업 평판’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늘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서 사회적 가치(S)를 창출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 환경(E) 관련

세제를 감면받는 기업이 앞으로 더 주목 받을 것이다.”

이중현 삼일PwC 조세부문 부대표의 설명이다.

환경 세금 핵심은 탄소세

IMF 기준 t당 75달러까지 인상

환경 관련 조세의 핵심은 탄소세다.

현재 탄소세 도입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이다. 일본의 경우 지구온난화대책(환경세)을 도입했다. 탄소세 도입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동시에 부과하되 세율은 자국 경제 상황이나 에너지 소비 구조에 따라 다르게 결정한다. 대체로 탄소세를 에너지세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낮게 설정한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해 감세와 환급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2019년 IMF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이산화탄소 배출량 t당 2달러인 탄소세율을 2030년까지 75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 발의로 탄소세 법률안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온실가스 t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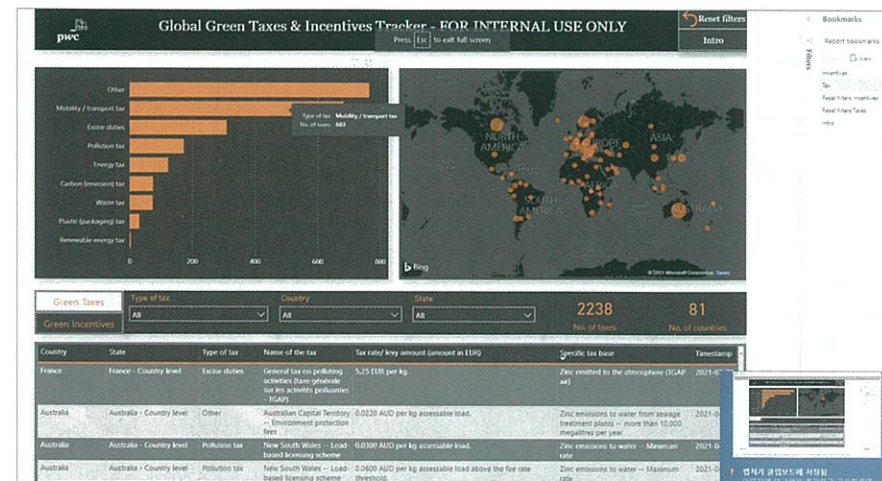
기업은 IMF 권고와 국내 탄소세 관련

법안 등에서 논의된 탄소세 부과안을 토대로 추가 비용 발생 규모를 따져볼 수 있다.

한 제조 기업 사례를 들어보자. 이 기업은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총 배출량 - 저감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담 규모를 최소 12억2000만원(IMF)에서 203억원(용혜인 의원안)으로 추계했다. 이 기업이 공시한 2019년 법인세 비용은 41억원, 영업이익 1295억원이다. 탄소세 부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당해 법인세 비용의 최소 30%~최대 496%, 당해 영업이익의 최소 1%~최대 16%가 될 수 있다.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은 향후 발생할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 관련 정부 세제 혜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 조세 지원을 받는다면 기업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환경 관련 조세특례는 ‘환경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액 공제’가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액 공제’는 세부 기술 분야 중 친환경 R&D 활동에 지원한다.

조세 정보 공시 대상 확대는 기업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에 기여한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4월 약 2억달러의 ‘탄소제거 복원기금(Restore Fund)’을 조성해 산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애플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 조세분쟁이 생길 만큼 여론이 안



환경오염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부쩍 늘었다. PwC는 빅데이터를 활용, 각국의 '그린'세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모두 분석해 알려준다. <삼일PwC 제공>

탄소세 발생 시나리오별 정보공시 예시

구분	시나리오1(IMF)	시나리오2(용혜인 의원안)
온실가스 총 배출량(A, tCO ₂)	509780	
온실가스 저감량(B, tCO ₂)	1568	
부과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C=A-B, tCO ₂)	508212	
탄소세율(D, CO ₂ t당)	2400원(2달러)	4만원
예상 탄소세 발생액(C×D, 억원)	12.2	203.3
법인세비용(억원)	41	
영업이익(억원)	1295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례 기업 통합보고서의 2019년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1은 2019년 IMF 현행안(1달러는 1200원으로 환산)과 시나리오2는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 법안의 2021년 부과율을 사용
*자료:태정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과 조세 제도 관련 연구' (2021년 5월 1일)

좋다. 애플의 산림 프로젝트 투자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성 세 부담이나 저세율국으로의 수익 이전, 조세피난처 활용 등과 같이 사회와 지배구조(G)에 맞지 않는 활동이 있는지 공시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투명하게 세금 내 '사회적 가치' 실현 조세 전략 컨트롤 타워는 '경영진'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조세 전략을 2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선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와 소비는 기업의 조세 회피를 민감하게 바라본다. 투자자는 각국 정부가 '탈세 회사'에 대한 처벌을 늘린

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을 단죄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실제 2021년 2월, EU 이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 내용, 매출,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다수결로 승인했다. 미국에서도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 법안이 제안됐다. 탈세 이슈 등 부정적인 문제가 부각되면 규제에 묶일 확률이 높아진다. 행동에 제약이 걸린 기업을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는다.

또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시민들은 이익만 누리

MANAGEMENT

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른바 '평판' 리스크다. 심수아 삼일PwC ESG 플랫폼 파트너는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아꼈을까'에 집중한다. 글로벌 기업은 다르다. 미국이나 EU의 회사는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을 지양하는 추세다. 투자자·소비자로부터 쏟아지는 '평판'에 대한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에 제 공하는 조세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국내만 해도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꽤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세무학 박사)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사회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제도가 꽤 많다. 정규직 채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경력단절여성 재고용·상생협력·성과공유 등 분야에서 조세특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ESG 조세 전략의 핵심은 'G(지배구조)'라고 강조한다. 기업 전략을 짜는 곳은 결국 최고경영진이기 때문

이다. 태정림 분석관은 "기업 고유의 조세 전략과 세금 투명성 관련 정보 승인은 이사회 같은 고위 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지배구조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관련해 전체적인 조세 전략을 짜는 곳은 회사의 세금 관련 부서와 이사회다. 담당 부서와 조세 전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회사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

이중현 부대표의 분석이다. ■

인터뷰 | 이중현 삼일PwC 조세부문 부대표

ESG 공시에 '조세 투명성'이 포함될 때를 준비하라

ESG와 세금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주제다. 조세 전략에서 ESG를 활용하는 회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립'된 기준이 없다. 정보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 기업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미국과 EU 등 각국의 규제에 맞춰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 맞는 조세 전략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ESG를 활용한 '조세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성공적인 ESG 조세 전략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중현 삼일PwC 조세부문 부대표에게 그 비법을 들어봤다.

Q. ESG 경영이 자리 잡으면 어떤 세무 전략이 필요한가.

A. ESG 경영이 일반화하면 기업이 요구받는 조세 부담과 사회적 책임이 증가한다. 환경 관련 부담금·탄소세 등 관련 조세가 국내외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때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 예측해두는 게 좋다. 또 ESG 규제로 기업가치 사슬과 공급망 환경이 바뀔 확률이 높다. 다국적 기업이라면 글로벌 생산망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전 가격 정책 설정 등 국제 조세 정책 전략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실제 기업 세무 전략을 공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A. 그렇다. 기업 조세 전략과 조세에 대한 시각을 공개하는 글로벌 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도 세무 리스크 평가 관리 활동, 국가별 세무 법규 준수 등 내용을 지속 가능보고서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Q. 해외 주요 국가 조세 정보 공개 규제는 어느 수준인가.

A. 2021년 2월, EU 이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 내용, 매출,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 법안이 제안됐다. 물론 사업 전략 노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조세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재정 상황'과 관련이 깊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재정지출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세원 확보와 기업의 정당한 납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조세 투명성과 관련한 정보 공개 수준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은 민간 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다. 2019년 GRI 207: Tax를 제정해 2021년부터 시행을 권고한다. 기업 조세 접근 방법·세무 리스크 관리·총 조세 부담과 국가별 보고서 공개가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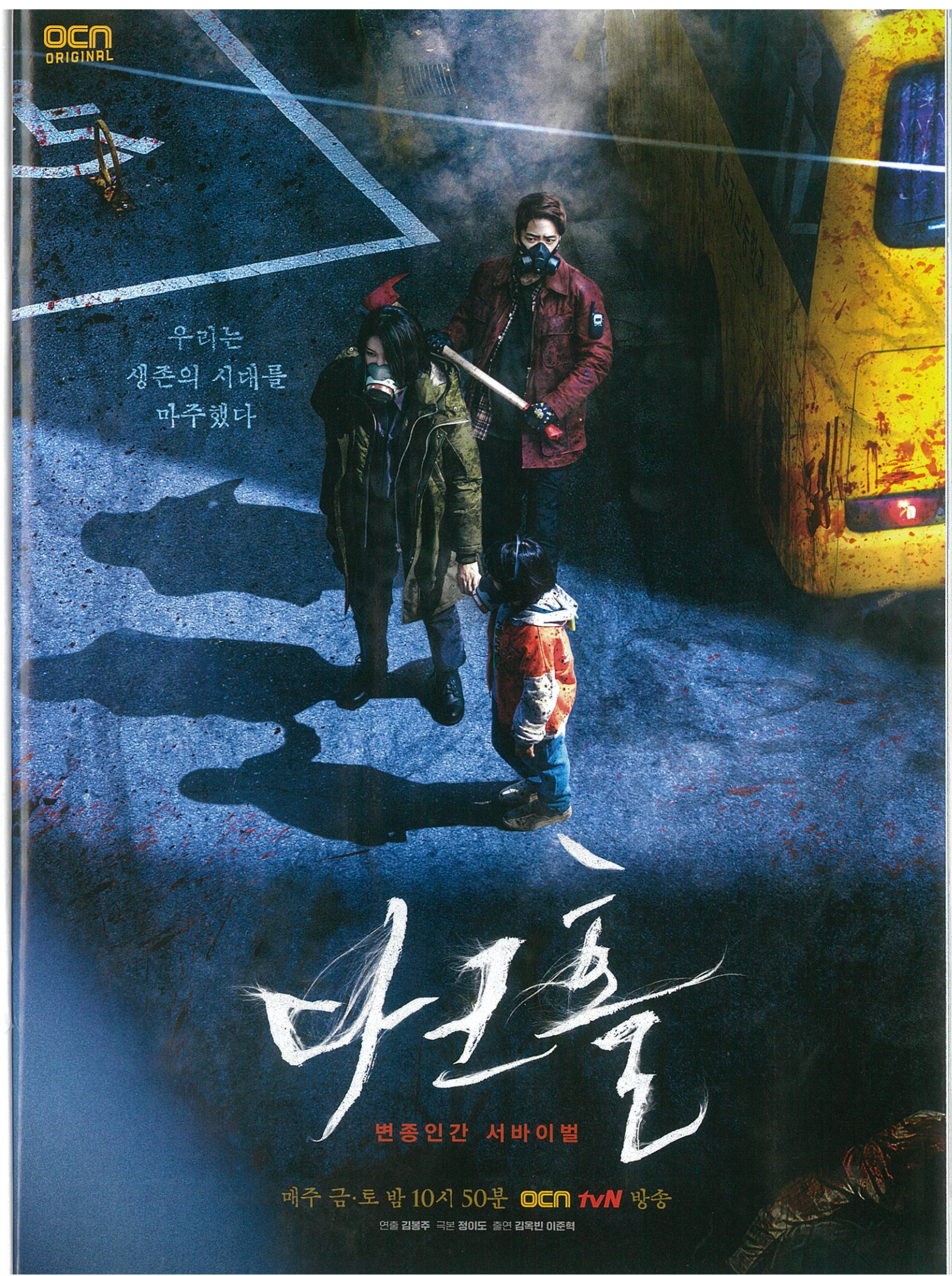
Q. 국내에서는 기업에 조세 투명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는가.

A. 이미 지난 10년 동안 OECD를 중심으로 BEPS(경제활동이 미미한 저세금 또는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윤을 옮겨 세금을 아끼는 행위)에 따른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왔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조세 규제 규정을 수용했다. 국제거래 관련 세 금자료 제출은 의무화된 지 오래다.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과세 관청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ESG 보고서·ESG 평가에 조세

투명성을 공시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 등 조세 투명성 요구 수준이 높은 지역 공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반전독 기자



매주 금·토 밤 10시 50분 OCN tvN 방송

연출 김봉주 극본 정이도 출연 김옥빈 이준혁